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10. 28.(월) 12:00
(지면) 2024. 10. 29.(화) 조간

범정부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·개방까지 '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' 만든다

-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, 2025년 6월까지 구축 추진
- 공유·개방 등 데이터 관리를 일원화해 기관의 업무 부담 감소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개별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분석 및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'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(이하 데이터 플랫폼)'을 구축하기 위해 10월 29일(화),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인 '데이터 플랫폼'은 각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·통합하여 범정부 공유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.



- ‘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먼저, 데이터 플랫폼에 각 기관이 보유한 모든 공유데이터를 모아 범정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.
 - 개별 기관이 공유데이터를 쉽게 생성·관리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을 배포하고, 개별 기관 시스템을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 데이터 공유·검색·활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, 대국민 개방, 기관 간 공유 등의 목적에 따라 별도로 생성·관리하던 데이터 제공 업무를 ‘데이터 플랫폼’으로 통합한다.
 - 기존에는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내부·외부 데이터 공유 시스템에 공유할 데이터를 일일이 등록해야 했으나, 앞으로 행안부가 배포하는 표준 시스템 등 기관별 데이터 공유시스템에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생성·관리·공유하고, 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계한다.
 - 기관은 데이터 플랫폼에서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, 대국민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로 자동 연계되어 국민·기업 등 민간에게 제공될 예정이다.



- 마지막으로, 데이터 플랫폼은 공공데이터포털,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, 개발 예정인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(DPG 허브)* 등 데이터가 필요한 다양한 공공플랫폼과 연계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.

* 민간·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가 안전하게 연결·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

- 특히, DPG 허브와 연계해 민간에서도 개방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AI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원천데이터 제공도 지원한다.
-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데이터 플랫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.
- 한편, 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보안 및 보호 솔루션을 적용하고, 통합 모니터링 및 관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행안부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병행하여 지난 2월 제2차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(2024년~2026년)에 ‘데이터 공유 전면 확대’를 포함해 데이터 공유·활용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했다.
- 기존에 데이터 공유는 기관 판단에 따라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던 방식으로 이뤄졌으나, 앞으로 공유 불가한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정책을 개선했다.
-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“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AI시대 공공 데이터 정책 추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데이터이며, 데이터 활용의 핵심은 공유다”라면서,
- “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공유·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, 민간에도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데이터관리과	책임자	과 장	임재진 (044-205-2480)
		담당자	사무관	박지연 (044-205-2486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